

【논 문】

1930년대 在滿朝鮮人の 教育政治史 연구

정 안 기*

Ⅰ 차 례 Ⅰ

- I. 머리말
- II. 만주국의 교육정책과 치외법권 철폐 문제
- III.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과 일제의 대응
- IV.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 이관문제와 鮮滿협약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30년대 중반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로 현재화했던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 문제의 발생과 그 귀결의 전체적인 추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문제는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사령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선만 양측은 협의와 절충을 거쳐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과 조선인 유력자의 만주국 관리임용을 연계하는 조건부적 해결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결국, 1930년 중반 교육행정권 이관문제를 둘러싼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과 정치적 대응은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으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전반 갈등과 대립지향의 선만관계로부터 협력지향의 선만관계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제국질서의 재편을 초래하는 정치적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재만조선인, 교육정치사, 치외법권 철폐, 도문회담, 교육행정권, 민족자치주의 식민통치

I. 머리말

이민이 이주자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의지의 표상이라면, 교육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기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이민과 교육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그래서 문제의 정치성을 내재한다. 실제로, 식민지기 재만조선인의 교육열은 재조조선인은 물론이고 만주지역 거주 여타 민족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재만조선인의 증가와 자제들의 교육문제는 주요 정치적 현안이었다. 1920년대 재만조선인은 일본의 입장에서 제국의 신민임과 동시에 不逞鮮人 이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제의 주구라는 점에서 탄압의 대상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포섭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1920년대 재만조선인 교육은 만주지역 특유의 지형학적 위치와 재만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일제의 대륙정책과 연동해서 조선인의 민족주의 교육,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 중국의 동화주의 교육이 경합하는 복잡한 양상이었다.

한편, 1930년대 만주국 건국과 함께 재만조선인의 교육 문제는 사상, 개혁, 금융, 실업문제와 함께 이른바 ‘재만조선인 5대 문제’의 핵심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1935년 말 만주국이 민족협화의 국시를 앞세워 재만일본인과는 구별해서 재만조선인의 치외법권 철폐와 함께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만주국의 조치는 일제가 표방하는 내선일체의 조선통치 이데올로기와 상극하면서 재만 재조조선인의 반발과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였다. 결국,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는 만주국과 조선통치의 정치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주요 변수였고,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사령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피하였다.¹⁾

종래 재만조선인 교육사 연구는 재만조선인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반비례하는 왕성한 교육열에 주목해서 ‘뜨거운 조국애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항일 무장투쟁의 인적자원 연구와 일제의 지배정책을 식민교육과 연계해서 그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²⁾ 그러나 이들 연

1)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제12집.

구는 주로 항일 무장투쟁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1920년대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한계를 갖는다. 실제로, 1920년대 재만조선인 교육은 사립학교 중심의 민족교육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교육정책이 재만조선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허수동은 만주국 건국 이후 1937년 치외법권 철폐에 이르기까지 간도지역 재만조선인 사립학교 설립 동향에 주목해서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의 특질을 검토하였다.³⁾ 또한, 박금해는 만주국기 전반에 걸쳐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의 특질을 고찰하였다.⁴⁾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사 연구에 치우치면서 1937년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와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 이관에 따른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과 그 결과가 초래한 교육정책과 식민통치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선만관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국사 차원의 연구 관심은 불충분하였다.

이 연구는 1936년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을 계기로 종래 갈등과 대립지향의 선만관계로부터 상호의존과 협력지향의 선만관계로 전환이라는 1930년대 중반 제국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주요 정치적 현안이었던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종래 연구가 일제의 교육정책사 연구에 치우쳤던 점을 고려해서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가 1930년대 중반 선만관계의 재편을 추동하는 정치역학으로 작용했다는 제국사 차원의 연구사적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⁵⁾ 일제의 교육정책만이

-
- 2) 槻木瑞生, 1974, 「日本舊植民地における教育-滿洲および間島における朝鮮人教育」,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21; 서평일, 1984/1985, 「1910년대 북간도의 민족주의교육운동-기독교학교 교육을 중심으로(I)·(II)」, 『백산학보』 29/30; 천경화, 1988, 「일제하 재만 한국인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1906~1920년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종필, 1994, 「만주사변 이전 재만조선인의 교육에 대하여」, 『명지사론』 6; 이명화, 1988, 「1920년대 만주지방에서의 민족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박주신, 2000,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박금해, 2010, 「1900년대 초~1920년대 日帝의 在滿朝鮮人 教育政策 연구」, 『史學研究』 99; 竹中憲一, 2000, 『「滿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第5卷 朝鮮人教育)』, 柏書房; 許壽童, 2010, 『近代中國東北教育の研究』, 明石書店.
- 3) 許壽童, 2002, 「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1932~1937-間島の朝鮮人私立學校」, 『一橋研究』 27-2, 65~86쪽.
- 4) 박금해, 2005, 「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 『동방학지』 130, 239~277쪽.

아닌 이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대응이 자신들의 장래와 기대를 규정하는 교육 정책과 그 영향이 선만관계에 미친 결과에 주목하는 교육정치사 연구이다.

II. 만주국의 교육정책과 치외법권 철폐 문제

1930년대 전반 재만조선인 교육은 만주국이 표방하는 왕도정치와 민족협화의 교육이념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帝國臣民化’ 교육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1935년 만주국은 치외법권 철폐와 함께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결정하였다. 이는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과 민심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이하에서는 1930년대 전반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의 발생 경위와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만주국 건국 전후 재만조선인 교육

1930년대 재만조선인 교육문제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에 따른 사상, 개척, 금융, 취업 등 이른바 ‘재만조선인 5대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조선인의 만주 이주 초기 교육은 주로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이 중심이었고, 근대적인 교육기관의 효시는 널리 알려진 1906년 9월 이상설과 김동녕이 용정(龍井)에 설립한 서전서숙⁶⁾이었다.⁷⁾ 이후 조선의 식민지화와 일제의 간도 진출은 조선인의 민족 교육열을 크게 자극하였고, 이는 명동학교와 광명학교 등 조선인 민족학교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만주사변 이전 재만조선인의 교육열은 다음과 같았다.⁸⁾

5) 조선과 만주국의 신흥통치 구조연관의 시각으로부터 대립과 갈등지향의 선만관계를 선구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田中隆一, 2007, 『滿州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社.

6) 윤병석편, 2007, 『한국독립운동과 서전서숙』, 사단법인보제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7) 당시 용정촌의 조선인 거주는 겨우 20호였고, 학생 수도 70여명에 불과하였다. 李鍾鼎, 1932, 『間島事情』, 以文堂.

재만조선인의 교육열이 왕성한 것은 이들의 생활난과는 반비례해서 매년 향상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많지만, 조선에서 일본인과의 생존경쟁에서 대항할 수 없는 원인이 교육부족이라 통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십호 집단을 이루면, 먼저 서당을 설치해서 자제 교육을 꾀하는 경향이고, 이들 자체들도 수십리를 마다하지 않고 통학한다.

당시 재만조선인 학교의 운영은 종교단체, 조선인 개인, 중국정부, 이민회사, 만철, 조선총독부 등이었다.⁹⁾ 그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재만조선인의 증가에 따라 1908년 간도보통학교를 시작으로 다수의 식민주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보조금과 교과서 보조 그리고 교원 등을 파견해서 재만조선인 교육에 깊이 관여하였다. 당시 재만조선인 교육은 1907년 통감부 시기 간도 파출소 설치와 함께 본격화하였고, 조선통치와 연계한 조선총독부의 공식적 관여는 1921년 7월 ‘재만조선인 사항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외무성 협정’ 이후였다.¹⁰⁾ 이후 재만조선인 교육은 만철 부속지의 경우, 만철 및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재만조선인 민회¹¹⁾가 경영했던 반면, 그 외 지역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외무성 교부 보조금으로 재만조선인 민회가 운영하는 방식이었다.¹²⁾

8) 滿洲帝國民政部總務司調査課編, 1933, 『在滿朝鮮人事情』, 60~77쪽.

9) 滿鐵經濟調査會, 1935, 『滿洲國教育方策』, 115쪽.

10) 朝鮮總督府, 1936.8, 「滿洲國に於ける治外法權の撤廢と朝鮮」, 『調査月報』 7-8.

11) 재만조선인 민회는 최초 1913년 안동에서 설립되어 이후 점차 만주 전체로 확산되었다. 1935년 말 현재, 만주국의 조선인 민회 설립 상황은 남만주 27개, 회원수 2만 4,111명, 북만주 47개, 1만 1,468명, 간도 66개소, 6만 6,777명으로 함께 99개소, 회원수 10만 2,356명을 달하였다. 朝鮮總督府, 1936.8, 「滿洲國に於ける治外法權の撤廢と朝鮮」, 『調査月報』 7-8.

12)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査會, 1935, 「在滿朝鮮人教育方策」; 滿洲國教育史研究會編, 1993, 『滿洲・滿洲國教育資料集成(제1권)-教育行政・政策』, エムテイ出版.

[표 1] 만주사변 전후 간도지역 조선인 교육현황

(단위 : 교, 명)

| 연도 | 조선인학교 | | 일본인학교 | | 중국인학교 | | | 외국인학교 | | 합계 | |
|------|-------|--------|-------|--------|-------|--------|-------|-------|-------|-----|--------|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 | | | | | 조선인 | 중국인 | | | | |
| 1926 | 191 | 7,895 | 43 | 4,610 | 163 | 5,451 | 4,034 | 19 | 1,177 | 416 | 23,167 |
| 1927 | 207 | 8,987 | 42 | 5,368 | 173 | 6,549 | 4,306 | 20 | 1,174 | 442 | 26,384 |
| 1928 | 208 | 10,106 | 43 | 5,368 | 167 | 7,529 | 4,053 | 19 | 1,019 | 437 | 28,075 |
| 1929 | 213 | 8,906 | 33 | 5,101 | 173 | 7,843 | 4,557 | 17 | 910 | 436 | 27,317 |
| 1930 | 170 | 7,885 | 36 | 4,989 | 209 | 10,197 | 5,184 | 16 | 1,218 | 431 | 29,473 |
| 1931 | 146 | 5,621 | 39 | 5,540 | 225 | 9,412 | 6,031 | 16 | 1,066 | 426 | 27,670 |
| 1932 | 137 | 5,384 | 39 | 6,592 | 202 | 6,561 | 4,854 | 16 | 1,526 | 394 | 24,917 |
| 1933 | 109 | 3,827 | 43 | 7,985 | 172 | 683 | 3,569 | 16 | 1,728 | 346 | 17,792 |
| 1935 | 122 | 11,424 | 47 | 12,420 | 139 | 3,061 | 6,290 | 18 | 2,995 | 326 | 36,190 |
| 1936 | 136 | 13,260 | 76 | 16,004 | 104 | 2,913 | 6,556 | 18 | 3,207 | 334 | 41,940 |

(*)중국인 학교 및 합계 가운데 학생 이외는 조선인에 한정한다. 이들 조선인 학교에도 중국인 학생도 있었지만, 극히 소수였다.

1932년부터 중국인 학교는 만주인 학교로 재편되었다.

(자료)間島日本領事館(1935), 『間島琿春地方學校調査表』; 吉林鐵路局(1937), 『間島ニ於ケル朝鮮人概況』.

1920년대 후반 간도지역 조선인 학교는 [표 1]과 같이 437교, 학생수 2만 4,022명에 달하였고, 이는 재만조선인 학교 전체의 70%, 학생수의 79%를 차지하였다. 특히, 재만조선인 사립학교 369개교 가운데 간도지역은 그 절반을 상회하는 208개교에 달하였다. 1928년 말 조선총독부 보조 학교는 간도 30개교를 비롯해서 52개교, 교원수 136명, 학생수 3,401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간도에는 함경북도가 관할하는 4개교, 교사 43명, 학생 2,320명이었고, 이들 학교는 도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였다. 또한, 만철 연선과 하얼빈 소재 조선인 학교는 1927년 7월 조선총독부 및 만철과의 협약으로 만철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였다. 이들 지역의 재만조선인 학교는 7개교, 교사 49명, 학생 1,798명, 운영비 6만 8,426원이었고, 운영비 가운데 5만 7,321원은 조선총독부 보조금이었다. 또한, 1925~26년 당시 재만조선인

학교에 대한 조선총독부 보조금은 [표 2]와 같이 28개교에 대해서 1925년 2만 6,160원과 1926년 2만 2,990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립학교 대부분은 일제의 행정권과 교육방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표 2] 1920년대 재만조선인 교육비 보조현황

(단위 : 원)

| 공관명 | 보조학교명 | 1925년 보조액 | 1926년 보조예정 |
|-----|---------|-----------|------------|
| 哈爾濱 | 英實학교 | 1,200 | 1,200 |
| | 東興학교 | 750 | 750 |
| | 英進학교 | 300 | 300 |
| | 光新학교 | 150 | 150 |
| | 麗興학교 | 200 | 200 |
| 吉林 | 鷄林학교 | 1,400 | - |
| 奉天 | 奉天보통학교 | 7,000 | 7,000 |
| | 新興학교 | 240 | 240 |
| | 明新학교 | 170 | 170 |
| | 朝天학교 | 170 | 170 |
| | 興京학교 | 900 | 900 |
| | 撫順보통학교 | 1,000 | 1,000 |
| | 東社보통학교 | 320 | 320 |
| | 孤家子보통학교 | 250 | 250 |
| | 東鮮소학교 | 180 | 180 |
| | 留置 | 570 | - |
| 通化 | 通化보통학교 | 1,500 | 1,500 |
| 長春 | 扶餘학교 | 1,760 | 1,760 |
| 鐵嶺 | 育英학교 | 3,000 | 2,400 |
| | 清河서당 | 600 | - |
| 拘麗 | 東山학교 | 2,700 | 2,700 |
| | 進成학교 | 300 | 300 |
| 海龍 | 協昌학교 | 250 | 250 |
| | 東明학교 | 450 | 450 |
| | 義興학교 | 200 | 200 |

| | | | |
|----|------|--------|--------|
| | 明新학교 | 250 | 250 |
| | 文化학교 | 250 | 250 |
| | 盛進학교 | 100 | 100 |
| 합계 | 28개교 | 26,160 | 22,990 |

(자료)朝鮮總督府政務總監(1926.4.19), 「在外朝鮮人 教育費國庫補助ニ關スル件」.

다음은 1920년대 재만조선인 교육의 실상과 관련해서 1926년 당시 鐵嶺育英학교의 실상을 검토해 보자.¹³⁾ 철령육영학교는 1917년 5월 조선인 張宇根이 역내 관민유지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창립 당초에는 민가를 임대 한 서당 수준의 교육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개교 1~2년 후에는 경비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19년 4월 조선총독부와 만철이 각각 교원 1명의 파견과 경상비를 지원하면서 점차 경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학제를 개편해서 조선지역 공립 보통학교의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1922년에 이르러서는 조선교육령에 준하는 보통학교로 탈바꿈하였다.

[표 3] 1926년 4월 鐵嶺育英學校의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 보통과 | | | | | | 보습과 | | 합계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1학년 | 2학년 | |
| 남학생 | 29 | 31 | 22 | 19 | 9 | 9 | 5 | 6 | 130 |
| 여학생 | 8 | 4 | - | 4 | 2 | 1 | 1 | 0 | 20 |
| 합계 | 37 | 35 | 22 | 23 | 11 | 10 | 6 | 6 | 150 |

朝鮮總督府政務總監湯淺倉平(1926.4.19), 「在滿朝鮮人教育費補助ニ關スル件」.

학교 운영은 교장 장우근, 조선총독부, 남만철의 공동경영이었다. 교지는 총면적 914평방미터, 운동장 326평방미터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였다. 교사는 만철이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는 만철이 소유하는 창고를 개조한 것이

13) 朝鮮總督府政務總監湯淺倉平, 1926.4.19, 「在滿朝鮮人教育費補助ニ關スル件」.

었다. 1926년 당시 학제는 [표 3]과 같이 보통과 6학년과 보습과 2학년이었고, 재학생은 보통과 138명, 보습과 12명으로 총 150명이었다. 학생 연령층은 11세에서 18세가 중심이었고, 재학생 등교는 기차 47명, 도보 49명, 기숙사 54명이었다. 학급편성은 총 4학급으로 교사는 조선인 2명, 중국인 2명, 일본인 2명의 합계 6명이었다. 일제의 운영 보조금은 [표 4]와 같이 1925년도 1만 3,068원과 1926년도 1만 1,784원을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 만철 보조액이 총액의 80%를 차지하였다. 학교 부근의 조선인 농가는 260호(1,444명)였고, 그 대부분이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인 학생들의 연평균 출석률은 97%에 육박하였다.

[표 4] 1926년도 鐵嶺育英學校 보조금과 지출내역

(단위 : 원)

| 구분 | 1926년도 | | | 1925년도 | | |
|------|--------|-------|--------|--------|--------|--------|
| | 조선총독부 | 남만주철도 | 합계 | 조선총독부 | 남만주철도 | 합계 |
| 봉급 | 1,920 | 4,965 | 6,885 | 1,435 | 4,778 | 6,213 |
| 수당 | 480 | 1,127 | 1,607 | 1,160 | 2,085 | 3,245 |
| 여비 | | 175 | 175 | 200 | 244 | 444 |
| 비품비 | | 250 | 250 | | 300 | 300 |
| 도서비 | | 200 | 200 | | 200 | 200 |
| 소모품비 | | 497 | 497 | | 518 | 518 |
| 피복비 | | 30 | 30 | | 18 | 18 |
| 영선비 | | 150 | 150 | | 200 | 200 |
| 기숙사비 | | 1,141 | 1,141 | | 1,260 | 1,260 |
| 잡비 | | 849 | 849 | | 670 | 670 |
| 합계 | 2,400 | 9,384 | 11,784 | 2,795 | 10,273 | 13,068 |

朝鮮總督府政務總監湯淺倉平(1926.4.19), 「在滿朝鮮人教育費補助二關スル件」.

2. 만주국의 건국과 재만조선인 교육정책

한편, 만주사변 이후 재만조선인 교육은 “지방 치안의 파괴와 조선인 학교와 서당이 거의 대부분 폐쇄되기에 이르렀지만, 반면, 안전지대의 학교는

피난민 자제의 전학과 신규 학생의 증가를 동반해서 현재의 설비로서는 겨우 20% 정도를 수용하는 상황¹⁴⁾이었다. 그러나 만주국의 치안회복과 조선인 만주이민 증가에 따라 앞서 [표 1]과 같이 조선인 학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였다. 만주국은 “신국가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는 전부 종족과 尊卑의 구별이 없다. 한족, 만족, 일본, 조선의 각 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도 장기 거주를 원하는 자는 모두 평등한 대우를 누릴수 있다…교육의 보급은 당연하고 禮敎를 존중해야 한다. 왕도주의를 실행하고, 境內의 모든 민족은 熙熙皞皞하며 春臺에 올라야 한다”¹⁵⁾는 이른바 왕도정치와 민족협화를 근간으로 하는 왕도주의 교육방침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만주국 건국과 함께 재만조선인 교육문제는 “日本 臣民으로 교육할 것인가, 만주국 국민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둘러싼 일본과 만주국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다.¹⁶⁾ 만주국은 ‘오족협화의 입국정신에 따라 만주국이 재만조선인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이미 간도에는 동화주의에 따라 현립·공립학교를 설립해서 재만조선인을 교육해 왔고…(중화)민국 자체와 공학으로 하등의 분규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만조선인 교육은 ‘동화방침에 따라 만주국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 제일 책’¹⁷⁾이라 주장하였다.

반면, 일본은 중화민국 귀화자를 포함해서 ‘재만조선인은 전부 日本帝國國民’이라 규정하고, 동화주의 차원에서 ‘재만조선인 교육은 일본제국이 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재만조선인 교육은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측이 관할하게 되었다. 실제로, 종래 중국인 학교와 외국인 경영학교는 만주국이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만조선인 학교 대부분은 조선총독부가 관할하였다. 1933년 12월 관동군은 ‘만주에서 조선인 지도방책’을 공포하고 “교육은 선내 교육에 준하고, 동시에 만주국 사정을 가

14) 滿洲帝國民政部總務司調查課編, 1933, 『在滿朝鮮人事情』, 60~77쪽.

15) 民生部教育司, 1940, 『滿洲帝國學事要覽』, 6~7쪽.

16) 滿鐵經濟調查會, 1935, 『滿洲國教育方策』, 141쪽.

17) 滿鐵經濟調查會, 1935, 『滿洲國教育方策』, 142쪽.

[표 5] 1934년 말 재만조선인 학교의 운영현황

(단위 : 人, 圓)

| 교육기관 | 학교수 | 학급수 | 교원수 | 이동수 | 1933년도 경비 | 경비상황 | | | | | | | | | | | |
|------|-----|-----|-----|--------|-----------|--------|--------|--------|-------|--------|---------|---------|-------|---------|--------|--------|---------|
| | | | | | | 교당 평균액 | 학급당 평균 | 이동당 평균 | 만주국 | 외무성 | 총독부 | 민청 | 은사금 | 민회 | 외인 團體 | 개인 기부 | 수입료 등 |
| 보통학교 | 188 | 596 | 654 | 28,349 | 699,319 | 3,720 | 1,173 | 25 | 360 | 2,360 | 178,662 | 200,210 | 1,100 | 167,592 | | 21,531 | 127,504 |
| 기타학교 | 250 | 591 | 595 | 28,253 | 298,572 | 1,195 | 505 | 11 | 2,926 | | 47,341 | 9,600 | 682 | 35,762 | 14,810 | 35,373 | 152,078 |
| 서당 | 71 | 84 | 85 | 3,032 | 43,653 | 615 | 520 | 14 | | | 6,250 | | | 7,380 | | | 28,555 |
| 유아원 | 25 | 39 | 35 | 1,056 | 16,937 | 679 | 436 | 16 | | | | | | | 1,747 | | 12,765 |
| 중등학교 | 6 | 28 | 63 | 1,348 | 71,899 | 11,983 | 2,563 | 53 | | 26,544 | 5,000 | | | | | | 40,355 |
| 사범학교 | 1 | 1 | 16 | 15 | 5,040 | 5,040 | 5,040 | 336 | | 5,040 | | | | | | | |

(주)사범학교는 광명학원을 가리킴.
 (자료)滿洲帝國國務院文教部(1935), 『在滿朝鮮人教育調査表』.

[표 6] 1934년 말 지역별 제만조선인 교육현황

(단위 : 人, 圓)

| 지명별 | 학교 수 | 학급 수 | 교원 수 | 이동 수 | 전년 경비 | 경 비 원 천 | | | | | | | | | | | |
|--------|------|------|------|--------|---------|---------|--------|--------|-----|-----|--------|-------|-----|----|--------|--------|---------|
| | | | | | | 교당 평균액 | 학급당 평균 | 이동당 평균 | 만주국 | 외무성 | 총독부 | 민철 | 은사금 | 민회 | 외인 단체 | 개인 기부 | 수업료 등 |
| | | | | | | | | | | | | | | | | | |
| 길림성 | 54 | 105 | 105 | 3,905 | 99,295 | 6,190 | 2,292 | 25 | | | 15,530 | 4,000 | | | 20,983 | 5,230 | 53,552 |
| 흑룡강성 | 11 | 22 | 20 | 607 | 20,755 | 1,887 | 975 | 34 | | | 500 | | | | 16,455 | 150 | 1,100 |
| 흑하성 | 5 | 6 | 6 | 120 | 3,540 | 960 | 788 | 20 | | | 700 | | | | 1,740 | 1,100 | 3,540 |
| 삼강성 | 23 | 37 | 37 | 1,550 | 32,579 | 2,618 | 1,936 | 16 | | | 300 | | | | 21,495 | 2,541 | 5,943 |
| 빈강성 | 66 | 139 | 136 | 5,662 | 100,461 | 3,695 | 1,785 | 16 | | | 800 | | | | 49,965 | 3,649 | 31,547 |
| 간도성 | 206 | 588 | 648 | 29,618 | 450,646 | 36,068 | 12,339 | 76 | | | 2,926 | | | | 35,112 | 25,447 | 191,226 |
| 안동성 | 71 | 166 | 179 | 8,278 | 134,708 | 7,986 | 2,360 | 14 | | | 19,465 | | | | 23,122 | 16,036 | 15,254 |
| 봉천성 | 95 | 232 | 254 | 10,974 | 232,229 | 6,750 | 3,104 | 17 | | | 360 | | | | 35,851 | 4,760 | 58,424 |
| 금주성 | 2 | 4 | 4 | 44 | 1,200 | 600 | 300 | 27 | | | | | | | | 682 | 518 |
| 신경특별시 | 3 | 21 | 23 | 1,119 | 28,783 | 14,857 | 1,850 | 23 | | | 240 | | | | | 360 | 2,956 |
| 하얼빈특별시 | 5 | 18 | 19 | 935 | 28,737 | 9,879 | 2,584 | 30 | | | 548 | | | | 1,820 | 400 | 4,770 |
| 홍안남성 | 6 | 10 | 9 | 317 | 5,597 | 2,382 | 1,072 | 17 | | | 960 | | | | 4,488 | | 149 |
| 홍안북성 | 2 | 3 | 2 | 19 | 1,992 | 1,992 | 1,042 | 86 | | | 420 | | | | 1,500 | 72 | 7,123 |

(자료: 滿州帝國國務院文教部(1935), 『在滿朝鮮人教育調査表』.)

미해서 보통교육과 실습교육을 위주로 한다”¹⁸⁾는 교육방침을 공포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1930년대 전반 재만조선인 교육은 만주국 건국에도 불구하고 동화주의에 입각한 ‘帝國臣民化’정책이었다.¹⁹⁾

1930년대 전반 재만조선인 교육은 만철 부속지의 경우, 만철과 조선총독부 교부 보조금으로 조선인 민회가 운영하였고, 나머지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외무성 보조금으로 조선인 민회가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었다. 이후 재만조선인 교육은 “사변 후 구동북정권 시대의 교권 회수정책과 같이 변잡하지 않고 동시에 벽지에서 匪禍가 감소함에 따라 재만조선인 교육은 일반민의 생활 향상 및 향학심으로 점차 발달”²⁰⁾하게 되었다. 실제로, 1934년 말 재만조선인의 교육현황은 [표 5/6]과 같았는데, 보통학교 188개, 기타학교 250개, 서당 84개, 유아원 25개, 중등학교 5개, 사범학교 1개교를 기록하였다. 학생 수는 보통학교 2만 8,349명과 기타학교 8,253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보통학교 학생 당 평균 운영비는 기타학교의 2배에 상당하였다. 보통학교의 운영비 원천은 조선총독부 보조금(25%) 비중이 컸던 반면, 나머지 사립학교는 수업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 재만조선인 교육은 학교의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교육 여건도 千差萬別이었고, 그래서 재만조선인 교육은 “만주제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자제의 교육기관이 무통제로 방임되어 다양한 경영계통과 사상계통으로 분리·대립”²¹⁾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종래 조선인 교육은 대체로 실패하였고, 그 대부분이 국가정책과 이반되는 주의와 방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고 단언”²²⁾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민족협화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복합 민족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만주국은 만주국 국민 창출을 위한 일원적인 교

18) 滿鐵經濟調査會, 1935, 『滿洲國教育方策』, 144쪽.

19) 許壽童, 2002, 「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1932~1937 - 間島の朝鮮人私立學校」 『一橋研究』 27-2, 65~86쪽.

20) 在滿日本大使館, 1935, 『在滿朝鮮人概況』, 50쪽.

21) 光明學園副長工藤重雄, 1934, 「在滿同胞教育統制二就テ」 在赤峰日本領事館, 『昭和九年度在外鮮人教育補助に關スル件』.

22) 滿鐵經濟調査會, 1935, 『滿洲國教育方策』, 152쪽.

육정책의 확립이 불가결하였고, 그래서 재만조선인 교육기관의 난립과 방임주의 교육은 만주국의 입장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현안이었다.

3. 치외법권 철폐와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

한편, 1935년 8월 일본정부는 만주국에서 치외법권의 철폐 및 만철 부속지 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결정하였다.²³⁾ 만주국치외법권철폐현지위원회는 재만일본인 교육에 관한 ‘교육행정처리요강’과는 별도로 “재만조선인교육행정처리요강”²⁴⁾을 결정하였다. 그 요지는 재만일본인 자제교육의 경우,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 유보하지만, 재만조선인의 자제교육은 일괄적으로 만주국에 이관한다는 것이었다.²⁵⁾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재만조선인 아동에 대한 교육은 치외법권 철폐 및 부속지 행정권 이양에 따라 別記의 교육요령에 따라 만주국에서 담당한다. 둘째, 전호에 의한 처리는 만철 부속지내 만인(한족과 만족을 포함)에 대한 교육행정권의 이양과 동시에 실시한다. 셋째, 만주국은 당분간 재만조선인 아동교육에 관해 주요 사항은 미리 일본과 협의한다.

실제로, 1935년 12월 對滿사무국은 현지위원회안을 검토하였다. 그 가운데 당시 일본 문부성 소속의 堀池榮一은 “조선인은 일본국민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초안이 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화한다면, 그 결과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조선통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런지도 모른다. 만약 이 초안이 공개된다면, 만주에서의 교육과 조선내 교

23) 치외법권 철폐와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 이관문제에 대한 선구적인 논의로는 田中隆一, 2007, 『滿州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社.

24) 「治外法權撤廢及滿鐵付屬地行政權ノ調整並ニ移讓ニ關スル機關(諸委員會)並決定要綱」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25)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 전후 재만조선인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倉島至, 1941.10, 「滿洲國に於ける朝鮮人教育に就いて」 『朝鮮』 265.

육을 차별함으로써 내선융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²⁶⁾고 우려하였다. 같은 지적은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을 일본인처럼 일본에 보류할 것인가 혹은 만주국에 이관할 것인가 하는 교육행정의 관할권 문제로 비화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재만조선인을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제국신민’으로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만주국의 민족협화 이데올로기에 따라 ‘만주국국민’으로 교육할 것인지를 둘러싼 제국통치의 본질을 가르는 문제였다.

관련해서 1936년 8월 관동군 참모장 板垣征四郎는 당시 육군차관 梅津美治郎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만주국에서 실질적 또는 역사적으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 불리하다…재만조선인 통치를 선내 통치와 분리해서 각각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²⁷⁾이라 주장하면서 재만조선인 감독권을 종래의 조선총독부로부터 만주국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였다. 관동군의 요청에 대해 당시 南조선총독은 “조선인을 실질적인 만주국 구성분자로 취급한다는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조선인도 국적법상 일본인의 지위를 갖는 점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만조선인을 일본 신민으로 재만일본인에 준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일본제국 출신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의 문제이며, 선내 통치에 대한 영향과 내선융화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²⁸⁾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도 1936년 8월 총독 교체와 관련한 사무승계 과정에서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²⁹⁾ 그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종래 재만조선인의 교육은 총독부가 담당해 왔지만, 만주국의 치외법권

26) 「治外法權撤廢及滿鐵付屬地行政權ノ調整並ニ移讓ニ關スル機關(諸委員會)並決定要綱」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27) 「昭和十一年八月五日, 關東軍參謀長發陸軍次官宛電報」 『陸滿機密』 11, 防衛省防衛研究所圖書館.

28) 「昭和十一年八月五日, 關東軍參謀長發陸軍次官宛電報」 『陸滿機密』 11, 防衛省防衛研究所圖書館.

29) 朝鮮總督府, 1936, 「在滿朝鮮人教育問題ニ關スル件」 『昭和十一年八月重要事務引繼書』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철폐에 따라 만주국 정부와 관동군은 재만일본인 자제 교육을 일본측이 계속 유보하게 하면서 조선인의 자제 교육만을 만주국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만일본인과 재만조선인 자제교육의 시설과 경영을 구별하고 양국으로 이분하는 것은 제국의 조선통치가 내선병행을 전제로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장래 조선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본부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그러나 만주 전역에 걸쳐 총독부가 재만조선인 자제교육의 시설 및 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실정이다. 따라서 만주 오지에 소재하는 학교 시설만을 만주국에 이관하고, 만철 연선의 주요도시 20개 학교와 간도 6개교는 종래와 같이 총독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재 만주국, 관동군, 대만사무국 등과 절충 중이다.

[표 7] 1935년 당시 재만 조선인 학교현황

(단위 : 명, 원)

| 지방별 | 학교수 | 학생수 | 보조금 |
|------|-----|--------|---------|
| 간도지방 | 74 | 13,731 | 161,200 |
| 만철연선 | 18 | 7,417 | 19,078 |
| 남북만주 | 139 | 15,876 | 103,212 |
| 합계 | 231 | 37,024 | 283,490 |

(자료)朝鮮總督府(1936.11.8), 「調査月報」 제7권 제8호.

특히, 문제가 되었던 1935년 당시 만철 연선의 재만조선인 학교는 [표 7]과 같이 학교 18개교, 학생 7,417명, 교육비 보조 1만 9,078원을 기록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간도 및 만철 부속지 학교시설의 보류를 강조했던 이유는 간도는 물론이고 만철 부속지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混住지역이고, 특히 조선인 민회를 중심으로 “조선인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교육 문제에 대해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화하면, 이들 지역 거주 지도계급이 받은 충격과 불만이 지대하기 때문”³⁰⁾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만철 부속지의 주요 도시와 간도 이외 지역 조선인 학교의 만주국 이관을 주장했던 반면, 관동군은 “이 문제는 오족협화를 국시로 하는 만주국 지도의 근본을

30) 朝鮮總督府, 1936, 「在滿朝鮮人教育問題ニ關スル件」 『昭和十一年八月重要事務引繼書』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건드리는 문제로 중시하고 있다……당측(관동군)은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보류는 만철 부속지에 한정하고자 한다……간도지역에 대해 당측(관동군)으로서는 도저히 총독부측의 주장을 용인할 수 없다”³¹⁾으로 입장이었다.

Ⅲ.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과 일제의 대응

한편, 재만일본인과는 달리 재만조선인에 한정된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는 만주국에서 재만조선인에 지위 변동과 함께 명백한 민족차별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민족차별적 치외법권 철폐는 재만조선인 사회는 물론이고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과 동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관동군사령부는 물론이고 조선총독부측도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재만조선인 사회의 동요와 반발

앞서 만주국의 결정은 종래 만주국에서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아왔던 재만조선인의 정치적 지위변동을 동반하는 명백한 민족차별이었다. 따라서 在滿普通學校聯合父兄會,³²⁾ 全滿普通學校教員一同, 全滿洲朝鮮人民會³³⁾을 비롯해서 봉천성과 하얼빈 등 일본 영사관까지도 ‘재만조선인 교육의 만주국 기관 절대 반대’ 혹은 ‘국민교육 본래 정신에 따라 일본정부가 시행하라’는 등 탄원서를 일본 외무성 앞으로 제출하였다.³⁴⁾ 물론, 조선내 민족계 언론

31) 「八月七日南總督宛板垣征四郎書簡」,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32) 在滿普通學校聯合父兄會, 1935.12.25,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第2卷)」, 外務省.

33) 全滿普通學校教員一同, 1935.12.24,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第2卷)」, 外務省.

34) 당시 奉天省 宇佐美총영사마저도 “재만조선인 처리방침에 관한 현지위원회안이 보도된 이래 당지의 조선인들이 심각한 충격한 받았다. 따라서 점차 반대운동이 표면화하고 있고, 22일 유지들의 제창으로 시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당관에서 선처한 결과 일단 중지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全滿조선인보통학교부형연합회 명의로 관계 방면에 전보한

도 수차례에 걸쳐 “재만동포 교육기관의 이관, 현지에서 반대 봉화”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³⁵⁾ 또한, 경성일보와 매일신보 등 조선총독부 관제언론마저도 여기에 가세해서 “재만조선인 교육의 만주국 이관은 불가, 각 방면에 중대한 파문”³⁶⁾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해서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 따른 재만조선인 사회의 반응과 실상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관련해서 1935년 12월 滿洲國奉天十間房在滿朝鮮同胞教育機關滿洲國移管對策攻究會가 일본 외무성 重光차관 앞으로 발송한 탄원서는 다음과 같았다.³⁷⁾

宇垣총독은 현재까지 명실공히 내선일체의 실현을 내외에 천명하고 실행해 왔다. 그러나 같은 조선인이 단지 만주에 在留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자제를 만주국 교육에 일임하는 것은 일한병합의 御詔勅 일시동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동포에 대한 그 이상의 치욕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만 2백만 조선동포는 물론이고 조선내 2천만 동포도 物情騷然해서 상당한 동요를 보일 것이다.

결국, 탄원서는 宇垣총독의 언설을 인용해서 1910년대 이래 일제가 표방하는 일시동인 혹은 내선일체의 조선통치 이념에 입각해서 재만조선인 교육을 재만일본인 교육과 동일하게 일본정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

사실이 있다. 더욱이, 23일 간담회 형식으로 유지의 회합(회합자 약 70명, 중심 인물은 민회평의원, 보통학교 교원, 신문 기자 등)의 결과, 재만조선인동포교육기관만주국이관 대책공구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공구회 결의에 근거해서 관계 방면에 대한 취지를 전보로 통지하였다. 당관으로서의 귀전(외무성)의 취지에 따라 野口연합회장에 대해 경계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외무성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野口도 충분히 양해해서 이미 조선인측에 대해서 운동을 엄금할 것을 전달했지만, 野口 자신으로서 본 건이 조선인의 장래 동향과 관련한 중대 문제임을 고려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재만조선인 교육은 국민교육 본래의 정신에 기초해서 일본 정부에서 시행해 줄 것). 奉天省宇佐美總領事, 1935.12.25,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第2卷)」, 外務省.

35) 『東亞日報』, 1935년 12월 19일.

36) 『每日申報』, 1935년 12월 19일.

37) 滿洲國奉天十間房在滿朝鮮同胞教育機關滿洲國移管對策攻究會, 1935.12.24,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第2卷)」, 外務省.

력하였다. 탄원서는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이 일시동인 혹은 내선일체의 조선통치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모순을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1935년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 결정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명백한 민족차별이었고, 일제가 추진한 조선통치의 기본이념이었던 ‘내선일체’와도 정면으로 상극하는 것이었다.³⁸⁾

2. 재조조선인 사회의 동요와 반발

한편, 1935년 12월 14일 동경중앙협의회에서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가 정식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소식은 곧바로 식민지 조선에도 알려지면서 민심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당시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와 관련해서 재만조선인의 지위를 규정했던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재만조선인 교육문제가 핵심이었다. 관련해서 1935년 9월 당시 민족계 동아일보의 논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³⁹⁾

만주에서 조선인 교육은 여러 가지 점에서 난문 중의 하나이다... 재만조선인이 전부 만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조선 사람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서 모국어에 의한 교육의 自由를 보장하도록 노력하는데 외교적 교섭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한 처지에서 조선인 교육을 만주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못노니 그러면 일본인의 자제 교육도 그와 같이 만주화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조선인 교육을 만주화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일본인들은 꿈에도 그 같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외무성측이나 조선총독부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고려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논설의 요지는 현지 조선인 사회가 내선일체에 입각해서 재만일본인과

38) 田中隆一, 2008, 「만주국민의 창출과 재만조선인 문제」 『만주, 동아시아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57~260쪽.

39) 『東亞日報』, 1935년 9월 21일.

달리 재만조선인에 한정한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는 반대하지만, 재만 일본인도 재만조선인과 동일하게 교육행정권을 만주국에 이관한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결코 재만일본인 교육행정권을 만주국에 이관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는 상황이었다. 관련해서 당시 조선총독부 관제언론 매일신보의 사설이다.⁴⁰⁾

오족협화 정신에 따라 재만조선인 교육을 만주국에 이관해서 경영케 하는 말이 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에서 누누이 보도한 바 있거니와 같은 문제는 조선인 문제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임으로 조선인 전체로서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주의 조선인 민회에서는 이 소식이 전하자 민회를 소집하고 조선인 교육문제를 만주국에 이관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온당치 못한 일이라 총독부에 조회하는 동시에 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재만조선인만이 아닌 재조조선인 사회도 재만조선인에 한정한 치외법권 철폐와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 크게 반발하였다. 매일신보마저도 재만조선인 교육을 일시동인 혹은 내선일체의 조선통치 이념에서 입각해서 재만일본인의 교육행정과 동일하게 일본정부가 관장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같은 문제에 대한 조선인의 동향은 1937년 4월 만주국 국무총리 장경혜의 경성방문과 조선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삼천리사는 조선인 유력 지식인을 대상으로 장총리의 경성방문에 대한 소감을 인터뷰하였다.⁴¹⁾ 그 내용은 ‘차별 대우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조선인의 만주 이민자에 대한 이주지역 제한,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 문제, 국경지대 여행증명, 조선인의 관리채용 등을 지적하며, 만주국의 국시였던 오족협화와 南총독이 제창한 鮮滿一如 슬로건에 입각해서 만주국의 주요 구성분자로서 재만조선인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를 탄원하였다.

40) 『每日申報』, 1935년 12월 19일.

41) 「在滿 백만 동포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에 온 張총리에 모하는 我等의 書」, 1937.5.1, 『삼천리』 9-4일.

이러한 현지 조선의 사회 여론을 반영해서 4월 24일 귀성에 앞서 장총리는 조선호텔에 마련된 송별회에서 “치외법권의 전면적인 철폐가 예상되는 와중에서 일부 반도인 가운데는 만주에서의 지위에 관해 다소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 구성분자의 일원으로 그 입국정신을 양해한다면, 이는 단지 杞憂에 불과하다”⁴²⁾고 역설하였다.

3. 관동군사령부와 만주국측의 대응

결국,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문제는 여러 문제와는 달리 1937년 중반까지도 여전히 “별개의 문제로 선만 당국자간의 정치적 해법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유보되었고, 기타 경찰권과 사법권에 대해서는 철폐의 조정 문제를 이미 결정하였다”⁴³⁾는 것이다. 이는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 막바지까지도 재만조선인 교육문제는 선만협상의 주요 안건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1936년 12월 말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와 함께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둘러싼 재만조선인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서 관동군사령부의 대응이다. 1935년 12월 25일 南관동군사령관은 廣田 일본 외무대신은 비롯해서 간도, 도문, 길림, 치치하얼, 하얼빈, 금주, 봉천, 정가둔 소재 일본총영사는 물론이고 宇垣조선총독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타진하였다.⁴⁴⁾

본 건과 관련해서 봉천보통학교가 27일 오전 9시부터 같은 학교에서 전 보통학교장 및 유지 직원들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외무대신이 訓達의 취지로 엄히 취체해 주기 바란다. 치외법권 철폐 이후 조선인 교육방침에 관련해서 人心을 자극해서 사태의 분규를 침체화시킬 우려가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검열에 특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

42) 本誌記者, 1937.6, 「張總理訪鮮動靜」 『朝鮮』 265.

43) 『每日申報』, 1937년 4월 11일.

44) 南大使, 1935.12.25,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 第2卷」, 外務省.

또한, 1935년 12월 26일 南관동군사령관은 “치외법권 철폐 이후 조선인 교육방침에 관해서 인심을 자극하고 사태를 분규·침예화시킬 우려가 있는 기사에 관해서는 검열에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⁴⁵⁾는 내용의 전문을 외무대신을 비롯한 조선총독 앞으로 타전하였다. 또한, 1935년 12월 28일 당시 南관동군사령관은 재차 廣田대신과 宇垣총독 앞으로 “만주국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교육에 관한 기사를 12월 28일부로 만주국, 관동주, 만철 부속지 및 조선의 신문, 통신, 잡지 게재를 금지할 것”⁴⁶⁾임을 타전하였다.

이상, 南관동군사령관은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 대한 재만 재조조선인의 반발과 동요에 크게 당황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동군사령부는 만주 전역은 물론이고 조선 현지에 대해서도 언론통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조선총독부도 현지 조선인의 동요에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관동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조선지역의 언론통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언론통제의 효과는 지극히 한정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 이관문제와 鮮滿협약

1936년 8월 만주국 현지위원회는 재만조선인의 치외법권 철폐와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결정하였지만, 조선총독부측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관동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현지적 해결’을 모색하는 선만협약이 불가피하였다.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45) 南大使, 1935.12.26,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 第2卷」, 外務省.

46) 南大使, 1935.12.28,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 第2卷」, 外務省.

1.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 이관 논의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둘러싼 선만협약에 대해서는 당시 관동청 사정국장이었던 武部六藏⁴⁷⁾의 일기를 통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935년 12월 14일자 일기에 따르면 “對滿사무국 회의에서 재만조선인교육행정처리안요강을 심의했는데 鹽澤군의 설명이 있었고, 鮮人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측으로부터 일시동인론에 기초한 원안 반대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회의에서 논쟁의 불씨⁴⁸⁾가 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만주국 결정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1936년 7월 8일자에 따르면 “조선인 교육문제는 조선으로부터 相川외사 과장도 출석해서 재만내지인 교육은 一時 일본측에 유보하는 한편, 선인은 만주국으로 이양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선인 교육을 유보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지만, 그 범위에 대해 총독부측은 부속지 선인학교 전부 외에 북만 등 주요 도시와 간도의 주요 학교 합계 40개교, 최소한 29개 교안을 주장했던 반면, 만주측은 만철 부속지 주요 학교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⁴⁹⁾는 것이다.

이는 1935년 12월 당시 원안 절대 반대의 입장이었던 조선총독부가 이후

47) 武部六藏(1893.1~1958.1)은 일본 石川縣 출신으로 東京府立 四中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거쳐 1918년 7월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였다. 1916년 10월 고등 문관 시험 행정과에 합격해서 1918년 7월 내무성 산하의 東京府屬兼 內務屬 地方局 府縣課에 배속되었다. 1919년 10월 長崎縣 이사관을 거쳐 내무부 농림과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여러 요직을 거쳐 1932년 6월 秋田縣 지사에 취임하였고, 1935년 1월 관동국으로 전임해서 관동국 사정부장을 거쳐 36년 4월 7일 관동국 총장에 임명되었다. 1939년 1월부터는 기획원 차장과 총재비서 그리고 1940년 7월부터 만주국 국무원 총무장관에 취임하였다. 1945년 9월 시베리아 억류를 거쳐 1950년 7월 전범 용의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계되어 무순전범관리소에 수용되었고, 1956년 7월 귀국하였다. 武部는 1935년 1월 관동국 사정국장 취임과 함께 1935년 2월 관동군사령관 직속 관동군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관동군 사령부, 대사관, 관동국, 만주국 관계관으로 구성된 ‘치외법권철폐현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武部는 1935년 9월부터 과세, 산업, 우정, 경찰, 교육, 사법, 지방행정의 전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래서 武部의 일기는 교육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었다.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415~418쪽.

48)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90~91쪽.

49)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25쪽.

관동군사령부와의 절충 과정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유보 지역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1936년 7월 29일 相川조선총독부 의사과장이 재차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板垣, 今村, 竹下, 鹽澤 등 관동군사령부측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역시 입장의 차이를 크게 좁힐 수 없었다.⁵⁰⁾ 그러나 관동군사령관을 사직한 南次郎의 조선총독 취임이 확실시되는 7월 31일에 이르러 논의가 급진전하였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⁵¹⁾

당초 만주안은 내지인의 경우, 일본의 행정권 유보, 선인은 전부 만주국 양도안이었지만, 총독부의 반대로 일부분의 유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측은 부속지 및 부속지 이외 학교 가운데 23개교 외에 간도 공립학교 6개교, 합계 29개교의 유보를 주장하였고, 관동군측은 간도의 무유보설에 대한 절대 유보반대로 대응하였다. 相川군과는 하등 일치를 볼 수 없었다. 지금의 정황으로는 우리측(관동국)의 仲裁도 하등 효과가 없고 결렬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중앙의 문제로 이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겠지만, 宇垣씨가 퇴관할 때까지 양보는 불가능하다. 또한, 소문에 따르면, 南대장이 오는 것도 그 또한 人氣屋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중앙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론적으로는 관동군측의 논리가 정연하지만, 이 또한 건국과 板垣類의 발상과 감정도 혼입되어 있다.

이상의 지적은 1935년 12월 당시와 비교하면, 사안을 둘러싼 관동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측은 여전히 宇垣 조선총독의 입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간도지역에 한정된 교육행정권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1936년 8월 3일자에 따르면, “지난 2일 신의주에서 今井田 정무

50)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33쪽.

51)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33쪽.

총감과 板垣참모장이 조선인 교육문제에 관해 회담했지만, 역시 간도문제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宇垣氏의 재임 중에는 도저히 결정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宇垣이 南과 大野의 배터리(battery)가 되고 있어서 그들(南총독과 大野총감)도 만주국 재임 중의 태도와 새로운 조선에 임하는 태도의 협격으로 곤란할 것⁵²⁾이라 예측하였다. 결국, 武部の 지적은 ‘만주트리오’의 보스였던 南이 비록 宇垣의 뒤를 이어 조선총독에 취임하더라도 그 동안 宇垣총독이 추진했던 조선통치의 원칙론과 그 정치적 磁場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제로, 1936년 8월 당시까지 조선총독부도 “(만주국이) 조선인 자체 교육에 관한 시설 경영을 구별해서 피아양국으로 이분하는 것은 제국의 조선통치가 내선병행의 표면적인 관계로부터 조선통치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으로 조선총독부는 절대 이를 용인할 수 없다”⁵³⁾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武部の 예상과는 달리 1936년 9월 27일 “大野총감은 재만조선인 교육문제에 관해 조선은 만주와의 특수관계 및 만주국 건국정신을 고려해서 만철 연선의 조선인 학교를 일본측(조선총독부)에 유보하는 것 외에 간도 등 학교 모두를 만주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에 동의하였다. 단, 조선내 사정도 있고 해서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내년(1937) 말 치외법권 철폐까지 이를 꼭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이로서 조선인의 교육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었다”⁵⁴⁾는 것이다. 결국,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 문제는 만철 경영의 14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전부를 만주국으로 이관한다는 ‘재만조선인 자체교육행정처리요강’⁵⁵⁾에 합의하였다. 이는 1937년 11월 치외법권 철폐와 부속지 행정권 이양에 관한 일만조약에 기초한 일만 양국 전권위원의 양해

52)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33~134쪽.

53) 朝鮮總督府, 1936, 「在滿朝鮮人教育問題ニ關スル件」, 『昭和十一年八月重要事務引繼書』.

54)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43~144쪽.

55)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小出直三郎, 1942.9, 「滿洲國に於ける朝鮮人教育の十年」, 『朝鮮』 328.

사항으로 정식 결정되었다.⁵⁶⁾

2. 도문회담과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

1935년 말 “(재만)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는 결국 조선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문제임으로 어디까지나 총독부는 당초의 뜻을 관철할 작정”⁵⁷⁾이라는 지적과 같이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조차 중대 정치적 사안이었다. 다음은 1936년 8월 당시까지 만철 연선을 비롯해서 간도지역 조선인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 반대했던 조선총독부가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교육행정권 유보를 만철 연선에 한정한다는 만주국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저간의 사정이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1936년 10월 도문회담에 임하는 조선총독부측의 입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실제로, 1936년 8월 제7대 조선총독에 취임한 南은 10월 20일부터 24일에 걸쳐 취임 이래 최초의 지방순시로 북선 시찰을 실시하였다. 南총독은 시찰 도중 10월 29일 만주국 통화성 도문 소재 일본영사관 분관에서 당시 南의 뒤를 이어 관동군사령관에 취임한 植田와 이른바 ‘圖們會談’을 개최하였다.⁵⁸⁾ 도문 수뇌회담의 주요 의제는 鮮滿一如 원칙의 결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 선만 산업경제의 불가분 관계의 심화, 선만 국방치안과 비적토벌의 공동대행 등이었다.⁵⁹⁾ 관련해서 조선총독부는 “금번 百尺竿頭의 일보로서 관동군사령관, 조선총독 양자가 직접 상접해서 선만 의존의 영구적인 기초를 결정하는 역사적 회견”⁶⁰⁾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도문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측이 도문회담에 임하는 정

56) 倉島至, 1941.10, 「滿洲國に於ける朝鮮人教育に就きて」, 『朝鮮』 317.

57) 『東亞日報』, 1935년 12월 7일.

58) 도문회담의 개최 경위와 내용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12.

59) 朝鮮總督府, 1936.12, 『朝鮮』 131.

60) 『朝鮮人通信』, 1936년 12월, 『朝日新聞』, 1936년 10월 31일, 『每日申報』, 1936년 10월 31일.

치적 입장이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南總督·植田關東軍司令官會談要領’은 다음과 같았다.⁶¹⁾

(1)종래 조선에서 일반민의 만주국 건설에 대한 사상은 出鮮鮮人(재만조선인)의 타산적 고려만으로 2천만 선민의 건국 창업에 대한 책임과 열의를 결여하였다. 이 때문에 출선선인은 선내 유식 조선인에 비해서 뚜렷하게 저급한 자가 많았다. 더구나 선내 유식 조선인 가운데 비교적 聲望者가 건국의 창업에서 전부 소외되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현재 선내 출중한 조선인을 만주국 정부의 중앙 및 지방 관료로 상당수 등용해서 만주국 내부에서 조선인도 오족협화의 일원으로 건국의 창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간도성 주민의 대부분은 조선인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당초부터 만주국 중앙정부의 위령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시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실체로서는 조선인에게 그 소임을 담당하게 해서 만주국 건업을 내로부터 공헌한다는 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장, 교육청장, 참사관, 시학 등 주요 부서의 관리로 조선인으로 등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3)재만조선인 교육권의 만주국 이양은 앞서 조항의 실시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 조선총독부는 만주국이 추구하는 五族協和의 일원으로 조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만주국 건국에 대한 조선인의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한다는 입장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총독부는 1935년 이래 선만 갈등의 핵심이었던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 문제를 결국 조선인 유력자의 만주국 관리임용과 연계해서 타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 동안 재만조선인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선인의 만주국 관리 임용과 연계하는 조건부적 해결책이었다.

3.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 임용

다음은 조건부적 해결책으로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 임용 실태를 검토해

61) 朝鮮總督府, 1936, 『南總督·植田關東軍司令官會談要領』,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보자.⁶²⁾ 실제로, 조선인의 만주국 관리 임용문제는 이미 1932년 만주국 건국과 함께 ‘간도성(省)을 만주국 자치구로서 관리는 조선인의 다수 등용, 신국가도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對滿정책의 주요 현안이었다. 또한, 만주국 내부적으로도 조선인 관리의 등용은 점차 중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실제로, 1934년 말 滿蒙일보는 “조선인 관리 등용 문제, 만주국 당국의 인식을 촉구한다”⁶³⁾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인의 취업난은 이미 내외지에 걸쳐 만성화하고 있다…그러나 만주에서도 그들의 등용을 주저해서 활동 무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재만조선인이 만주국 발전에 공헌하게 하고자 한다면, 만주국 정부에서 조선인 관리를 다수 채용해야 한다…농민의 증가에 따라 조선인을 지도·통제해야 하는 지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간도와 동변도의 경우는 조선 농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방으로 조선인 관리, 교육자, 의사 등을 다수 배치해야 한다…조선 청년은 상당히 고급학교를 졸업했지만, 조선은 물론이고 만주에서 취직이 곤란하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중대 문제이다…조선인 관리를 채용하는 것은 만주국의 당연한 정치적 책무이다.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 임용은 1937년 4월 22일 만주국 국무총리 장경혜의 경성방문에 앞서 4월 20일 南총독 추천으로 당시 조선상업은행(주) 두취였던 박영철이 만주국의 초대 명예총영사에 임명되면서 본격화하였다. 이는 “鮮滿一如의 견지에 입각한 선만 통상관계의 긴밀화”⁶⁴⁾라는 경제교류와 조선측의 對滿무역 확대를 의도한 것이었다. 또한, 관동군사령부는 조선총독부측과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지도를 명분으로 조선인 최고 고문을 초빙하는 인선 문제를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37년 7월 9일 만주국

62) 조선총독부와 관련한 만주국의 조선인 관료 연구에 대해서는 廣岡淨進, 2009, 『滿州國間島省の官僚構成 - 朝鮮總督府との關係を中心にして』,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編,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

63) 『朝鮮通信』, 1934년 8월 22일.

64) 『毎日申報』, 1937년 4월 22일.

은 조선총독부 추천에 따라 당시 ‘조선 재계의 福澤’로 회자되었던 한상룡을 관동군 고문에 임명하였다.⁶⁵⁾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임용에 대한 당시 南총독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⁶⁶⁾

이것은 최초로 만주국에 임관한 것으로 鮮滿一如의 초석이 될 것임으로 그들의 영광이고 책임이 중대하다. 만주국 관리로서 총량하고 그 책임을 다하여 만주국측과 관동군의 신뢰를 받게 된다면, 장래에 임명되는 조선인 관리도 많아질 것이다. 작년 10월 도문에서 植田 관동군사령관과 회견하였을 때 만주국의 오족협회의 입국정신에 입각해서 조선인의 관리 임명을 약속했던 것이 금번에 실현되었다. 이렇게 해서 선만 양측의 이해는 이들 전입관에 의해 더욱 호전될 것으로 믿는다.

1936년 10월 도문회담 이래 조선총독부는 산업, 경제, 교통만이 아닌 인사의 선만일여 슬로건을 앞세워 조선인 우수관료의 만주국 관리 전입을 추진하였다.⁶⁷⁾ 그 결과, 1937년 7월 중순 이범익(충추원 참의), 이필동(서산군수), 김창영(금산군수), 김광근(전주지방법원 판사), 홍영선(창성군수), 차화선(예천군수) 6명을 인선하였다.⁶⁸⁾ 이후 이범익은 만주국 국무원 촉탁을 거쳐 1937년 11월 조선인 최초의 간도성 성장에 취임하였다.⁶⁹⁾ 또한, 1939년 말 이범익은

65) 『每日申報』, 1937년 7월 9일.

66) 『每日申報』, 1937년 8월 15일.

67) 『每日申報』, 1937년 7월 17일.

68) 『每日申報』, 1937년 8월 13일.

69) 이범익은 1883년 충북 단양 출신으로 1903년 외국어학교 교사를 거쳐 춘천, 금천, 예천, 달성, 칠곡 군수를 지냈고, 1923년 조선총독부 사무관을 거쳐 황해도 내무국장과 경남참사관, 충남지사,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하였다. 1935년에는 충추원 참의원관과 동양척식(주) 감사를 겸하였다. 1937년 11월 간도성 성장에 취임해서 1938년 9월 간도특설대(간도성특별설치부대) 창설을 주도하였고, 재만조선인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이범익은 1940년 5월 간도성 성장을 퇴임하고 만주국 참의부 참의로 전임하였다. 이후 溥原範益으로 창씨를 개명하였다. 1945년 4월 만주국 참의부 참의를 사임한 이후 귀국해서 같은 해 6월 충추원 고문에 임명되었고, 7월에는 조선국민의용대총사령부 차장에 임명되었다. 1946년 3월 반민특위 경기도조사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반민특위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다가 8월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50년 8월 6.25전쟁의 와중에서 납북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납창룡은 저서에서 이범익이 1945년 이후 간도성 副성장 윤태동과 함께 소련 紅軍에 체포되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

간도성의 조선인 관리 채용을 목적으로 경성을 방문해서 조선총독부 앞으로 약 70명에 달하는 조선인 관리의 만주국 진출을 청원하였다. 그 구성은 이사관 1명, 사무관 5명, 속관 37명, 기사, 기수, 의관, 의원 등이었고, “이사관과 사무관은 조선내 도이사관과 군수급, 속관은 본부와 지방청, 기술자는 각각의 기술부문에서 채용할 것이며, 이미 다수의 지망자가 있다”⁷⁰⁾는 것이었다. 또한, 1937년 9월 조선총독부는 만주국과 협의를 거쳐 제2차 조선인 고등관 20명의 만주국 전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관리의 만주국 진출에 따른 조선인 고등관 확보를 위해 종래 조선총독부의 관리 등용 내규를 완화해서 조선인 고등관 정원의 증원 조치를 단행하였다.⁷¹⁾

또한, 만주국은 조선으로부터 조선인 관리의 전입만이 아닌 만주국 조선인 민회를 해산해서 협화회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조선인 민회 간부를 만주국 관리로 임용하였다. 실제로, 1938년 말 조선인의 만주국 관리 임용은 1937년 12월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에 따라 조선총독부 관계 직원과 민회 직원 2,127명이 만주국 관리로 임명되었다. 또한, 1937년 7월 만주국의 행정개혁에 따라 조선인 중견관리 25명이 만주국 관리로 임명되었다.

1930년대 후반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 임용은 행정관리만이 아닌 조선인 사법관도 포함하였다.⁷²⁾ 실제로, 조선인 사법관의 만주국 법관 임용 문제는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문제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부터 논의되었다. 1935년 5월 당시 조선총독부는 치외법권 철폐와 관련한 만주국의 조선인 사법관(판사)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인을 위해서 民政風俗을 이해하는 조선인 판사를 당연히 채용해야 한다’이라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1937년 6월 말 “만주국에서 치외법권 철폐와 선만일여 정신의 구현을 위해 조선 현지

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남창룡, 2000, 『만주제국 조선인』, 신세림, 131~134쪽.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친일인명사전』, 역사연구소, 866~870쪽.

70) 『每日申報』, 1939년 11월 1일.

71) 『每日申報』, 1937년 9월 3일.

72) 『每日申報』, 1935년 5월 3일.

로부터 조선인 행정관 20명의 채용과 함께 총독부 추천으로 조선인 법관을 채용”⁷³⁾하게 되었고, 우선 조선인 사법관 가운데 이상기(당시 경성지방법원 판사)와 김광근(당시 전주지방법원 판사)을 내정하였다.

또한, 만주국은 중견관리 양성기관 대동학원 출신의 조선인을 현지 채용 형식으로 만주국 관리로 임용하였다.⁷⁴⁾ 여기에 당시 만주국의 정신적 모체임을 자처했던 협화회 소속 조선인 중견 직원까지 가산하면, 약 3,000명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천임관은 약 50여 명이었고, 간임관으로는 최남선(건국 대학 교수,⁷⁵⁾ 박석윤(외무국 조사처장,⁷⁶⁾ 진학문(내무국 참서관, 이범익(간도성 성장), 류홍순(간도성 민생청장) 5명이었고, 천임관으로는 윤상필(척정사 제2지도과 장)과 그 외 수십명이 관공서 과장급에 채용되었다. 그 결과, 당시 만주국 수도新京에는 조선인 인구 약 1만 명에 가운데 조선인 관공리와 국책회사 회사원 등 이른바 “창백한 인테리”⁷⁷⁾가 약 1,000여 명에 달하였다. 또한, 1940년 7월 “만주국 참의로 특임한 前간도성 성장 이범익씨를 필두로 간임관 4인, 천임관 48인에 금번 봄 새로 고시에 합격한 30인을 추가하면, 현재 83인의 선계 고등관이 만주국 정부에 봉직”⁷⁸⁾하는 상황으로, 만주국 정부의 조선인 고관이 약 100여 명에 달하였다. 실제로, 1942년 당시 재만조선인의 직업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관리 2,300명과 함께 교원과 은행원을 포함해서 약 5,600명을 기록하였다.⁷⁹⁾

73) 『每日申報』, 1937년 6월 29일.

74) 최충희, 2010, 「만주국 대동학원 조선인 학생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철, 1996, 「만주국의 관료를 꿈꾸는 조선인 대동학원 출신자들」, 『민족문제연구』 12.

75) 류시현, 2011, 『최남선 평전』, 한겨레출판.

76) 장세윤, 1994, 「朴錫胤」, 『親日派九人(2)』, 돌베개.

77) 洪陽明, 1939.1, 「大陸進出の朝鮮民衆, 滿洲國에서活躍하는 그現象」, 『三千里』 11-1.

78) 「滿洲國에 朝鮮人の高官 百餘名」, 1940.7, 『삼천리』 7.

79) 滿洲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36쪽. 반면, 친일인명사전에서는 만주국에 근무한 조선인 관료 총수를 대략 3,000여명으로 집계하였으며, 그 가운데 조선인 고등관은 200명 내외로 추산하였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친일인명사전』, 역사연구소, 75쪽.

V. 맺음말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 임용문제는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1935년부터였다.⁸⁰⁾ 결국,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 임용과 연계한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 문제는 재조 재만조선인 사회의 민심 이반과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민족차별을 희석화시키는 이른바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의 식민통치’라는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1930년대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사 연구와의 관련이다. 종래 만주국기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연구는 주로 정책결정론에 치우치면서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를 계기로 하는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문제의 현재화와 이에 따른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수 없었다. 실제로, 1930년대 중반 이른바 ‘재만조선인의 5대 문제’ 가운데 그 핵심을 가르는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는 1935년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결정하면서 현재화하였다. 그러나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는 재만조선인에 한정된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과 내선일체의 조선통치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였다. 조선인 사회의 반발과 동요는 제국 차원의 식민통치 구조연관으로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사령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즉,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은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민심 동요로 이어지면서 1936년 10월 선만 수녀의 도문회담의 개최를 불가피하는 정치적 현안이었다. 도문회담의 결과는 재만조선인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선인의 만주국 관리 임용과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연계시키는 조건부적 해결책이었다.

80) 이와 관련해서 만주국 조선인 관료가 단지 “치외법권 철폐 후에 적극 등용된 것이 아니라 만주국에서 토착관료의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경향”으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廣岡의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廣岡淨進, 2009, 「滿州國間島省の官僚構成 - 朝鮮總督府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編,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

결국, 1930년대 중반 선만 양측의 중대 정치적 현안이었던 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권 문제와 해결 방식은 결국 조선인의 만주국 관리 임용과 연계되면서 만주국에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의 식민통치’ 혹은 ‘민족자치주의 식민통치’라는 식민통치정책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재만조선인은 만철 연선 재만조선인 보통학교 14개교의 교육행정권 이관 유보와 함께 조선총독부로부터 70만 원의 교육보조금을 끌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1930년대 치외법권 철폐를 전후로 하는 재만조선인 교육정책과 그 변화는 종래의 연구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만주국 주도의 국민화 교육 혹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의 결과만이 아닌 자신들의 장래와 의지와 기대의 표명으로서 자체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재만조선인의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또한, 재만 재조조선인 사회의 대응은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으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전반 갈등지향의 선만관계로부터 협력지향의 선만관계로의 전환과 함께 제국질서의 재편을 추동하는 정치역학으로도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 이인영, 1984, 『한국 만주 관계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서평일, 1984, 「1910년대 북간도의 민족주의교육운동」 『백산학보』 제29호
- 천경화, 1988, 「일제하 재만한국인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명화, 1988, 「1920년대 만주지방에서의 민족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 홍종필, 1994, 「만주사변이전 재만조선인의 교육에 대하여」 『명지사론』 제6호
- 김민철, 1996, 「만주국의 관료들 꿈꾸는 조선인 대동학원 출신자들」 『민족문제연구』 제12호
- 한석정, 199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남창룡, 2000, 『만주제국 조선인』, 신세림
- 박주신, 2000,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 신규섭, 2003, 「『만주국』의 치외법권철폐와 재만조선인에 대한 인식」 『대동문화연구』 제43권
- 박금혜, 2005, 「만주사변 후 일제의 재만조선인 교육정책 연구」 『동방학지』 제130호
- 정미량, 2007, 「일제 강점기 재만조선인의 교육과 그 체험」 『한국교육사학』 제29권 제2호
- 윤병석편, 2007, 『한국독립운동과 서전서숙』, 사단법인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제201집
- 박금혜, 2010, 「1900년대 초~1920년대 일제의 재만조선인교육정책 연구」 『사학연구』 제99호
- 류시현, 2011, 『최남선 평전』, 한겨레출판
- 윤희탁, 2013,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 滿洲移民研究會, 1972,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御茶の水書房
- 槻木瑞生, 1974, 「日本舊植民地における教育-滿洲および間島における朝鮮人教育」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제21권
- 鈴木敬夫, 1989, 『朝鮮植民地統治法の研究-治安法下の皇民化教育』,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 淺田喬二, 1991, 『日本帝國主義の滿州支配』, 時潮社
- 磯田一雄, 1993, 「皇民化教育と植民地の國史教科書」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岩波書店
- 副島昭一, 1993,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山本有造編, 『滿洲國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蘭信三, 1994, 『『滿洲移民』の 歴史社會學』, 行路社

- 驅込 武, 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 塚瀬 進, 1998, 『滿州國「民族協和」の實像』, 吉川弘文館
- 竹中憲一, 2000, 『「滿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第5巻 朝鮮人教育)』, 柏書房
- 許壽童, 2002, 「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 1932-1937; 間島の朝鮮人私立學校」 『一橋研究』 第27권 제2호
- 山本有造, 2003, 『「滿州國」の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大江志乃夫, 2005,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膨張する帝國の人流』, 岩波書店
-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舎
- 金美花, 2007, 『中國東北農村社會と朝鮮人教育』, お茶の水書房
- 田中隆一, 2007, 『滿州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社
- 荒武達朗, 2008, 『近代滿洲の開発と移民』, 汲古書院
- 廣岡淨進, 2009, 「滿州國間島省の官僚構成-朝鮮總督府との關係を中心に-」,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編, 『日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
- 姜尙中編, 2010, 『大日本・滿州帝國の遺産(興亡の世界史)』, 講談社
- 許壽童, 2010, 『近代中國東北教育の研究』, 明石書店
- 蘭信三, 2011, 『帝國崩壊とひとつの再移動、引揚げ、送還、そして残留』, 勉誠出版

■ Abstract ■

A Study of the Educational and Political History of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in the 1930s

Joung, An-Ki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general traces of issues surrounding th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which began to emerge with a discussion about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ity in Manchukuo (Manchu Nation) in the mid 1930s. Previous studies regarding the educational history of Korea residents in Manchuria have primarily focused on imperialist Japan's policy decision-making. In view of such facts, the present study paid attention to political changes that had resulted from the resistance and responses of the Korean community in Manchuria and to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uch changes. Actually, the issue of transferring th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rights of Koreans in Manchuria to Manchukuo led to resistance from the Korean community. As a result, it was inevita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Japanese Kwantung Army to take active counteractions in response to the resistance. In the end, the Korean community and Manchukuo, by going through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sought a conditional solution by which they could settle the transfer of Koreans'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rights to Manchukuo in tandem with the appointment of Koreans of influence as Manchukuo's officials. These actions of imperialist Japan mean a changeover to the so-called "colonial administration policy of national autonomism for temporarily appeasing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community and diluting national discrimination. Eventually, the resistance and political responses of the Korean community in Manchuria to the transfer of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rights in the mid 1930s led to the Korea-Manchukuo summit talk

in Tumen and acted as a political driving force for the reorganization of imperial order, that is, the conversion of Korea-Manchukuo relations from conflict and confrontation during the early 1930s to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Key words :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Educational and political history,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ity, Tumen talk,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rights, Colonial administration of national autonomism